

정부, 포괄임금제 금지 검토... 기업들 '비상'

고용부, 내달 말께 '사업장 지도지침' 발표... 포괄임금제 엄격 적용 골자 기업들, 일반 사무직 포괄임금제 금지 원칙에 난감... "유연한 적용 필요"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환급해야 할 3년치 수당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쟁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달 말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추후에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해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이같은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 운용 중이다. 대법원은 정확한 노동시간 측정의 어려움, 회계상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수당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은 야근을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포괄임금'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포괄임금제로 야근 등 추가 근로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됨으로써 노동자들이 추가 근로를 하면서도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 과로사의 원인이라며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부의 기본적인 인식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제 문제를 손 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실시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중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52.8%(6만1000곳) 수준이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에 출퇴근과 휴게 시간이 명확히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일반 사무직은 포괄임금제 적용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선 사무직의 근로시간 산정이 쉽지는 않으나 더 엄격한 입장이냐는 이유로 난감한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생산직의 경우 근로시간과 평가가 쉽게 연동되지만 사무직은 근로시간 보다는 얼마나 더 일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엄격하게 하기가 어렵다"며 "현실적인 부분들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무직중에서도 은행원 같이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금지할 수 있었지만 기획, 연구 등의 업무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며 "사무직의 경우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법이 적용된다면 이 같은 문제는 노사간의 협의로 정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더 큰 우려는 미지급된 법정수당 지급 문제에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기업에 대해 실근로시간을 적용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3년이라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고려해 3년치 밀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도 상당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계는 환급해야 할 3년치 수당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쟁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과거 기업과 근로자들이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간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

공정위, 재신고사건 심사위 '민간 중심'으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재신고사건의 사건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다.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재신고 접수 시 조사관이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는 3인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해관계인이나 전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명시해 이들이 심의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했다.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심의 중에 참고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신청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14일 인천 한국지엠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열린 웨보레 내버 기보 업 캠페인 1000+1 차량기증식 행사에서 수혜자 가족과 배리영을 사장이 악수하고 있다.

지엠 웨보레, 스파크 경품 행사 첫 당첨 고객에 차량 전달

한국지엠 웨보레가 대리점 방문 고객 대상 웨보레 스파크 경품 행사의 첫 당첨 고객을 회사로 초청해 차량을 전달하며 '웨보레 새로운 출발, 고객과 함께'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열린 행사에는 배리 영 GM 해외사업부(GMD)사장, 카허 카펠 한국지엠 사장,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위원장과 한국지엠 임직원이 함께 했다.

카펠 사장은 "고객과 지역사회를 향한 웨보레 브랜드의 열정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며 "많은 고객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과 탁월한 서비스로 새 각오를 다지고 있는 웨보레 전사

장에 방문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대리점 방문 프로모션은 방문 고객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총 100명의 웨보레 스파크 당첨의 주인공 중 첫 10명은 오는 23일 예정된 '뉴 스파크' 미디어 출시 행사에 초청된다.

대리점 방문 이벤트 기간 동안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기부 행사도 함께 열린다. 고객이 방문 이벤트에 응모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1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의 미래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시스

직장인 80% "관리자급에 불만 있다"

팀원급 대상 조사결과... 불만사항 1위는 '관리자 자질'

<p>직장인 5명 중 4명은 임원·팀장 등 관리자급 직장인에 불만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준비의 시작, 잡코리아가 임원, 팀장 등을 제외한 팀원급 직장</p>	<p>인 648명을 대상으로 '관리자급 직장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직장인 78.4%가 관리자급 직장인에 불만사</p>
--	---

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책임회피, 업무편향 등 ▲관리자 자질에 대한 불만(42.1%)을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았다(*복수 응답). 다음으로는 실무능력 미흡 등 ▲업무관련 불만(32.7%), 야근 강요 등 ▲워라밸 관련 불만(26.0%), 주관적인 인사평가 등 ▲평가 관련 불만(25.4%) 등 다양한 불만사항이 이어졌다.

/뉴시스

무주택 중기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전북중기청, '익산 마동 코아루 디벨리체' 특별 공급 신청... 18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익산 마동 코아루 디벨리체'의 특별 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통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겸블링 및 배당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은 신청 불가능하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공사는 대창건설로, 주택 위치는 익산시 마동 170-1번지 일원이고,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전용면적 75㎡A형 15세대, 75㎡B형 6세대로 총 21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청약자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

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반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식약처, 국민청원 검사 33건 진행 중... 어린이제품 다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달 24일부터 시행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관련 총 33건의 추천이 진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현재 1만8000여명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이트에 접속해 56건의 청원을 신청했다. 이 중 33건(식품 26건, 화장품 4건, 위생용품 2건, 의약품 1건)이 국민추천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추천대상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안전에 관심이 많았다.

국민 추천을 받은 청원 중 다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6월 중 심의해 1차 검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